

# 민주 ‘전대 룰’ 후폭풍…당권레이스 출발부터 파열음

비대위, 전준위 의결안 번복 결정에 곳곳 강한 반발  
친이 “민주주의 죽이기” vs 반이 “역선택 방지 권어내야”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교문의 당권 도전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선 룰을 둘러싸고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5일 민주당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의 의결안 일부를 뒤집은 것을 두고 곳곳에서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안규백 전준위위원장은 이날 위원장직에서 전격 사퇴했고, 친이(친이재명)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비대위의 결정을 되돌리기 위한 연판장까지 돌았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무엇보다 비대위가 당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컷오프) 선거인단을 기존대로 중앙위원들이 독식하도록 한 것이 뇌관으로 작용했다.

전준위가 ‘중앙위 100%’였던 예비경선 투표 비중을, ‘중앙위 70%-국민 여론조사 30%’로 변경했으나, 비대위가 이를 원위치시키면서 사단이 난 것이다. 비대위의 ‘번복 결정’이 나오자 당내 성토가 빚발쳤다. 주로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앞장섰다.

이 교문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을 비롯한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대위가 당원들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절차마저 훼손하는 결정을 했다”며 비대위의 결정을 되돌리기 위한 ‘전당원 투표’를

요구했다. 회견 성명서에는 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총 38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친이재명계 김남국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이런 전대 룰이라면 이재명도 얼마든지 컷오프될 수 있다”며 “비대위의 결정은 민주당의 민주주의를 죽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병욱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예비경선에) 국민여론조사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었으나 비대위는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당권 주자인 강병원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중앙위는 오랫동안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들을 잘 추려서 국민께 내보이는 기능을 해왔다”면서 “이재명을 컷오프하기 위한 비대위의 결정이라는 주장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친명계 주장과 거리를 뒀다.

아울러 바이재명계에서는 본선에서 실시되는 국민 여론조사를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상대로만 하도록 한 ‘역선택 방지’ 규정을 그대로 놔둔 데 대해 화살을 돌렸다. 역선택 방지 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강성 당원의 여론만 ‘일반 민심’으로 반영된다는 주장이다.

조용천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여론조사라고 해봐야 결국은 민주당 지지층에 국한돼 일반 민심과는 괴리된 결과가 나온다”며 “역선택 방지



기자회견하는 친이재명계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대 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규정을 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가 ‘최고위원 권역별 득표제’를 도입한 것을 두고도 파열음이 잇따랐다. 친이재명계에서는 권역별 득표제가 최고위원 출마를 검토 중인 수도 권 강경파 조선 의원들의 ‘지도부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마저 품고 있다.

이에 비대위 관계자는 “지도부 선출에 있어 지역

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은 당헌·당규상 권고에 불과했다”며 “이 문제를 비대위에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했고 그 과정에서 합의안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재명 상임교문의 당권 도전을 강력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기본과 상식을 벗

어난 행동을 보면 창피함을 느낀다. 대선 이후 민주당 당 대표와 대선후보의 행동이 그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광주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의 이재명’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사실상 이 교문의 전대 불출마를 촉구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 온 우상호 “전준위, 비대위 의견 반영없이 결정”

### “당 혁신으로 호남지지 회복”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준비한 경선 룰을 비대위가 뒤집은 데 대한 당내 반발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전준위가 비대위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결정한 면도 있다”고 반박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광주 전남대에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비대위가 전준위를 무시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지난 3일 저녁 비공개 비대위 간담회에 안규백 전준위위원장과 조승래 전준위 간사가 참석한 자리에서 이견이 나왔다”며 “4일 전준위 회의가 있으니 비대위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위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 안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해 그림(섭섭할) 수는 있지만, 조간사가 비대위 토의 과정을 지켜봤다”며 “전준위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그 문제를 언제까지 끌 수는 없기 때문에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 위원장이 비대위 결정에 반발해 사퇴하면서 “전준위와 사전 교감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

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우 위원장은 예비경선 선거인단에 ‘일반 여론조사 30%’를 반영하기로 한 전준위 안을 백지화하고 기존의 ‘중앙위 100%’를 유지한 것에 대해 “전준위 결정 내용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했다”며 “후보자가 10명이 넘는 다수인 경우 일반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겠느냐. 여론조사를 변별력 확보가 어렵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최고위원 선거의 1인 2표 가운데 1표를 ‘권역별 투표’로 강제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 호남·영남·충청권 인사가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해 수도 권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전국적인 여론을 청취해야 할 지도부에 이들 지역 출신이 진입하지 못하면 심각하다고 우려해 도입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에서 열린 미니특강을 통해 호남지지 회복을 위한 당내 혁신을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의 37.7% 투표율을 보고, 이것이 광주 시민이 민주당에 보내는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많이 낮아진 것으로 민심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연합뉴스

## 지역 문화계,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내정에 비판 목소리

### “문화경제부시장제 도입 의구심 문화도시 지향 가치·철학 빈곤”

지역 문화단체가 민선8기 첫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에 김광진 전 국회의원이 내정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은 5일 ‘강기정 시장의 문화경제부시장 인사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라는 논평에서 “강 시장의 민선 8기 문화정책의 비전과 철학은 고사하고 문화경제부시장제 도입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의구심이 들

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경제부시장 인선 기준을 중앙정부와의 관계와 예산 확보의 용이성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도시가 지녀야 할 가치와 철학의 빈곤함만 대내외로 확인해주는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단은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있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문화경제부시장의 책무와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현실적으로 문화경제부시장제 도입 취지에 부합된 인사가 어려우면 솔직하게 정부(경제)부시장제로 환원하면서 이해를 구하는 것

이 정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화도시를 표방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시민들의 문화적 삶은 나아지지 않고 정체돼 있다”며 “지역의 문화생태계는 고사 직전이고 문화산업 경쟁력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문화경제부시장으로 내정된 김 전 의원은 강 시장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인수위원 등을 맡았다. 이에 앞서 강 시장은 이번 인사 배경에 대해 “국회와 정부에서 경험을 쌓고 ‘균형발전, 신활력, 청년, 국방’이라는 키워드를 갖추고 있다”고 김 내정자를 소개한 바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여야, 후반기 원구성 2라운드…상임위장 배분 곳곳 지뢰밭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의 2라운드가 시작됐다.

여야가 극적으로 국회의장단을 합의의 선출해 더불어민주당 단독의 ‘파행 개원’ 상황을 막아냈다는 점에서 국회 정상화의 물꼬는 마련된 셈이다. 이 제 여야의 남은 숙제는 상임위원장 배분이다.

핵심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회 배분이다. 우선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국민의힘은 기존 여야 합의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자당 몫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민주당은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 배분에 대해 여야가 조속히 협의할 문제라며 온도 차를 보이는 상황이다.

법사위를 제외한 상임위 배분 논의도 전망이 낙관적만은 않다. 국민의힘은 우선 법사위 외에 운영위와 국방위는 반드시 차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운영위의 경우 국회 운영을 총괄하며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만큼 위원장을 집권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검찰 인사 편중’ 등 대통령실 내부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라도 운영위를 가져오겠다고 주장한다. 원내 1당의 지위도 근거로 삼고 있다. /연합뉴스

## 투자자 모심

1. 자금 - 5억원 이상
2. 기간 - 2년~3년 정도
3. 물건 - NPL, 금매물, 경매특수물건
4. 수익 - 연 20% 이상 법적 보장
5. 보장 - 근저당 또는 소유권 이전
6. 지역 - 경기, 수도권, 전남/광주
7. 방식 - 단독 또는 공동투자

주식회사 오 천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  
H. 010-3605-5000